

“남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서성부 의장

2025년을 마무리하며 세해의 구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제9대 남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제9대 남구의회는 여섯 번의 정례회와 스포츠클럽 편의 임시회를 통해 128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의결하고, 16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사

해 왔습니다. 이는 남구의 변화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회의 진심과 책임의 결과입니다. 남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비전 아래 유엔평화문화특구 대통령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금융 자사 고 설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남구문

화재단 출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구정의 성과이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구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자부심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을 재정비하는

민주적 통제의 장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행정 신뢰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은 정책의 설계도입니다. 남비를 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생 예산이 온전히 구민을 위해 쓰이도록 세심히 살펴주시시오. 의회는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민 권익을 지키는 감시자입니다.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실천하며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부산 남구 소방·구급 안전망 확충 촉구 건의문

부산 남구는 대단지 재개발로 인해 최대 14,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 및 구급 출동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는 구급차 1대당 담당 인구가 62,800명이다. 이는 타 지역보다 현저히 많으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부산의 구급대 출동 현황에 따르면, 대원1:2구급대와 용당구급대가 상 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골든타 임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현재 남구의 소방 방재 업무를 맡고 있는 남부소방서는 수영구와 남구를 함께 관할하고 있고, 문현동은 부산진소방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에 남구 지역을 전담하는 남구소방서 신설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 즉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다음 재난은 대비가 아닌 돌이



킬 수 없는 후회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반영과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구급·소방 인력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단기적으로 남구 지역에 구급차를 최소 2대 이상을 증설하라
하나. 남구 지역 내 119안전센터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남구 지역을 전담하는“남구소방서”신설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5. 11. 20.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청소년기자단, 남구의회 의장 인터뷰 진행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 기자단이 11일 남구의회를 방문해 서성부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질문하며 진로 탐색 경험을 쌓았다. 서성부 의장은 “남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며 “여러분도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 학생들은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보니 진로 고민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호2동 복합청사 방문 (기획행정위원회)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창현)는 부산남구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용호2동 복합청사와 남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공간숲 방문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보고받았으며, 경제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공간숲과 남구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소소마실 문헌 플랫폼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이후 의원들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

50년 숙원의 결실, 남구와 유엔공원의 공존



김철현 의원 (용당,갑남·2,우암동)

10월 23일, 「유엔 기념공원 주변 경관 지구 관리방안」이 ‘조건부 동의’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50여 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을 푸는 첫걸음이자,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오론타 구청장남께서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부산시와 유엔기념공원 관리처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하며 결실을 이뤘었고, 박수영 국회의원남께서는 직접 총회 현장에서 관리방안을 설명해

국제위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50년간 불편을 감내하며 노력해 주신 주민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남구와 부산시, 국회의원,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공동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느 한 개인이나 정권의 공로로만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조건부 동의’는 유엔기념공원의 역사를 존중하며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길을 약속한 것입니다. 유엔기념공원의 품격을 지키며, 주민의 일상이 함께하는 도시를 위해 저 역시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비판, 정치의 본질은 신뢰!



박미순 의원 (용호1·2·3·4동)

제340회 임시회에서 박구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호만 마린나 조성 용역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보고회에서 양당 의원들이 참여해 방파제-정온도·경제성(B/C 1.15)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박 의원은 계류장·주차장 확보를 제안했고, 최종보고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방파제 필요성을 논했습니

다. 이에 용역사와 부구청장은 “정온도 확보는 필수이며 방파제 연장 필요성 을 건의 중”이라 답했습니다. 보고서에도 방파제 설치의 항만공사와 해수부 소관으로 명시되어, 이는 상위기관 협의 절차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구 아파트연합회의 청원에는 마린나·호텔 등 복합휴양시설 조성에 15,220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와서 행정의 부실이라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발언입니다. 남구의회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실 위의 비판이 필요합니다. 의회의 견제는 ‘발목 잡기’가 아닌 ‘방향잡기’여야 하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정의 역할입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그대로 둘 것인가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본의원은 황령산 배수지 위치 변경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시는 2005년의 낡은 도시계획만을 내밀며, 3천 세대가 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주민의 안전, 둘째, 2005년과 다른 현재 황령산 주변 환경, 셋째, 케이블카 하기와 제3황령터널 계획 등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모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이 시작한 사업을, 같은 당 박수영 국회의원이 막고 있다고 하나, 진정 주민을 생각했다면 시장에게 위치 변경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강행, 국민의힘은 해결’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과는 그 대립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에 대한 폐지 의사를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둘째, 폐지 후 위치 재검토 및 도시계획 재수립에 협력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상수도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낡은 계획과 상부 기관의 압박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성지, 재산권 회복과 도시 발전의 균형을



박구순 의원 (대연4·5·6동)

50년 넘게 고도제한과 경관지구 지정으로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개선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7천여 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한 끝에, 최근 ‘조건부 동의’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저는 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으며, 4년간 주민분들께서는 멈추지 않았습니

다.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재범 전 남구청장남과 중앙정부와 부산시를 잇는 역할을 해주신 박재호 전 국회의원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의 의견 반영, 둘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 적용, 셋째,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성과 남구의 발전이 조화되는 장기적 계획입니다. 이번 변화는 주민과 행정, 정치가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남구의회 민주당도 역시 내로남불



김철현 의원 (용당,갑남·2,우암동)

최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표결과 관련해 의회의 원칙과 일관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와 같은 건이 상정됐지만,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은 표결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9대 의회에서는 본인이 발의해 놓고 부결되자 동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김근우 의원 역시 과거 ‘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합의 없이 안전을 밀어붙이고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 의원 또한 8대 후반 기 의장 시절 민주당의 부결 결정에는 문제 제기 없었으면서, 동일한 상황을 두고 지금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표결은 다수결 원칙이며 결과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으로 존중돼야 합니다. 정치가 감정이 아닌 원칙과 신념으로 움직일 때 의회의 신뢰가 세워집니다. 민주당은 8대와 9대에서의 서로 다른 태도를 성찰해야 합니다. 정쟁이 아닌 책임과 일관성이 살아 있는 남구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워킹스쿨버스’로!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워킹스쿨버스’란 통학 방향이 비슷한 초·중·고등학생들이 정해진 지점에 모이면 교통안전지도사나 봉사자가 동행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 습관을 익히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행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751건, 사망자 10명으로 여전히 심각하며, 사고의 52.9%가 하교 시간대인 만큼 ‘운중일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남구는 재개발로

보행로 축소와 임시 동선 변경이 찾아 통학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대안이 바로 ‘워킹스쿨버스’입니다.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 부산 북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우리 남구도 문현동 등 통학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노선을 마련하고, 특히 하교 시간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 예산과 교통안전지도사, 자원봉사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남구형 워킹스쿨버스’의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이 빨리 되도록 행정절차를 바꿔야



허미향 의원 (용당,갑남·2,우암동)

현재 남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42개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증가, 사업비 상승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는 한정된 인력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동시에 처리하며 민원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서 민원이 많은 부서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아 결정됩니다. 사업 지연은 비용증가, 사업 불

확실성, 조합 내 갈등 등 주민에게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행정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건축과 내 재개발팀을 강화하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할 ‘갈등조정관’ 배치 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비사업 자문단’과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스톱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느린 행정과 복잡한 절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는 행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출석요구 부결 사태, 알 권리를 막는 다수당의 횡포!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해 구정질과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실태를 듣고 책임을 묻는 의회의 핵심 권 한입니다. 오늘 박구슬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회복되어야 하며, 출석요구는 특정 정당 입회 결과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 1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박한 의원의 출석요구도 같은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당인 구청장을 보호하며, 소수당의 질의권을 막

는 행태는 구민 대표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16개 구·군의회의 구정질문 건수를 보면 제9대 기준 부산진구 46건, 중구 11건, 서구·기장구 10건인 반면, 남구의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장·부의장·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독점하며 의사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본래대로 회복되어야 하며, 출석요구는 특정 정당 이해가 아닌 구민의 권리와 의원의 의무입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의사행정을 촉구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남구 ESG센터



박경숙 의원 (비례대표)

부산시의 ‘우리 동네 ESG센터’는 자치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시가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구에서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버려진 장난감 수리·기부, 페플라스틱 세척·재가공을 통해 생활용품 생산하며, 어르신들이 보람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장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만큼 수거 차량의 동선과 안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시니어클럽의 역량에 따라 남구민의 기념품·생활용품 등 특색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므로 단순 수거에 그치지 않는 확장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품 단가가 높은 만큼 공공부문의 우선 구매 방안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습니다. ESG센터는 환경보호, 어르신 일자리, 아동 교육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형식적 운영이 아닌, 남구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ESG센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